



도 “균형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자치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높아졌다.

28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주재로 김성희·고동진·모경중·박덕홍·박정현·박수민·이해식·정춘생·채현일·한병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감사는 전북의 인구 구조, 산업 여건, 재정 자립도 등 지역 현안을 냉철히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7.1% 감소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며 “매년 약 8,5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 내 산업기반이 취약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전북은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중심지이지만 산업 다양성이 부족해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은 2024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지방 분권의 모범’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의 틀에 묶여 있다. 김 지사는 “지역 특화 산업을 테스트 베드로 운영하려 했으나 예산 자율권이 제한돼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방교부세 확대, 국고보조율 차등 인상, 별도 재정 계정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보고를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새만금 글로벌 규제 ZERO특구 지정 △RE100 가속화와 주력산업 친환경 전환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업유치와 육성으로 전북경제 체질 개선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북특별법 실효성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명했다.

그리고 주요현안으로 △산북특별법 2차 개정안 입법지원, △제2중앙경찰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김관영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 인구 감소·산업기반 약화로 지역 소멸 위기 맞아 김 지사 “지방교부세 확대·국고보조율 차등 인상 등 필요” 전주 하계올림픽·새만금 사업 등 주요 현안 집중 논의

학교 설립 부지 남원 유치 지원, △(가정)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유치 지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지원, △통합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기준 완화 및 배분기준 보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정지원,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등을 건의했다.

감사에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제도가 지방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중앙이 사업을 쥐고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 62.48%에 그치고, 전북도 역시 4.09억 원 중 994억 원이 미집행된 점이 지적됐다. 기금이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 사업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북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며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4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은 지역경제 도약의 기회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과 초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30년간 지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를 설계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RE100 전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서 울행정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김 도지사는 “공항은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완성할 핵심 인프라

라”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이 2024년 기준 5,300명에 이르는 가운데, 도의 핵심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청년 정책이 부서별로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도지사 직속의 청년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북 청년의 평균 월세가 46만 원을 웃도는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주거·문화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전북연구원 내 재난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폭우 피해를 겪고도 재난 대응 조직이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없어 타 광역단체보다 조직 규모가 작고,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 예산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구체적 실행 성과는 미미”

민주 이원택 의원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 조사로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지만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가 집단을 거쳐 수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복합단지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식료단지, 농업특화단지, 농촌마을·도시, 농업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 단계적 개발

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결과물을 보면 복합복합전문생산단지(499ha)로 전체 면적의 5.3%에 불과하고 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질뿐 일부 구간의 농생명용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로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차원의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성 기자

도, 농식품부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공모 2곳 선정

정읍 친환경늘녇영농조합 김제 동진강낙농축협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정읍시 친환경늘녇영농조합(230ha)과 김제시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169.8ha)이 선정되어, 사업비 65억7,700만원(국비 30억5,800만원)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지원받는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지역의 집단화와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2개 단지(399.8ha)가 추가

됨에 따라 도는 총 21개소, 9,779.8ha 규모의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도내 조사료 재배면적(3만1,347ha)의 약 31%에 해당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사일리지 제초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을 일괄 지원받게 되며, 일반 재배지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10~20%가 높아 그만큼 지방비와 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공·이용 활성화가 촉진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새로운 L
대한민국 농업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추천! 전주매일 창간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장수군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 담례품 3만원)

고향사랑e음
http://ilovegohyang.go.kr

부활의 효능

맑은 물의 기운을 받아서 하고 온몸을 키우며 속을 따뜻하게 해 겨울을 넘으며 만물을 새겨준다. 또한 소화가 잘되는 자연 하악제철의 물자에게 식이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국립보한방의 황희 토종 약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농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불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김성수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박점용